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2005 ~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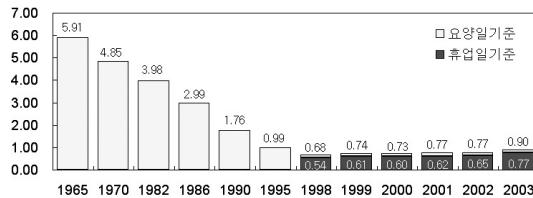
제1장 산업안전보건의 현 수준 및 실태

1. 산업재해 추이 및 현황

가. 재해율(사망만인율)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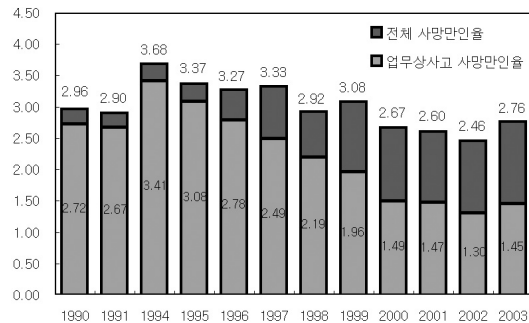
재해율은 60년대 4~5% → 70년대 4%대 → 80년대 2~3%대 → 95년 최초로 1% 미만 진입 → 98년 0.68%(사상 최저수준)이후 증가세로 반전되어 03년에는 0.90%를 기록하였다.

〈재해율 변화추이〉



사망만인율은 재해율과는 달리 9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추세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근로자 1만명당 2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망만인율 변화 추이〉



나. 업종별·규모별·재해유형별 발생현황

최근 5년간(99~03년) 재해를 업종별로 보면 전체 재해(382,650명) 중 제조업이 44%로 가장 많고, 건설업이 22%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전체 재해의 87%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재해의 68%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전체 재해 중 업무상사고 재해가 93.0%, 업무상 질병이 7.0%이나, 점차 업무상질병 비중(94년 1.3% → 00년 5.9% → 03년 9.6%)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업무상사고 재해는 추락, 협착, 전도, 충돌, 낙하·비래 등 5대 재래형 반복재해가 전체 사고 재해의 76.3%를 차지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은 난청 등 직업병이 26.2%, 작업관련성 질환이 73.8%이나, 작업관련성 질환 비중(97년 45.4% → 00년 72.7% → 03년 79.1%)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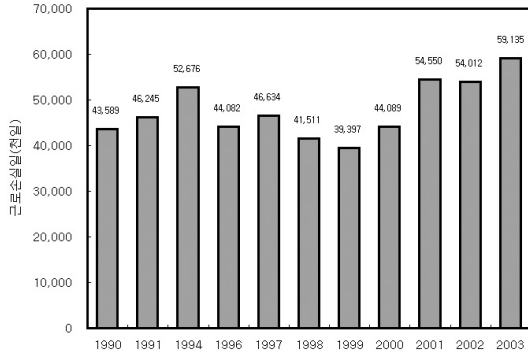
(1) 근로손실일수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의 약 40배나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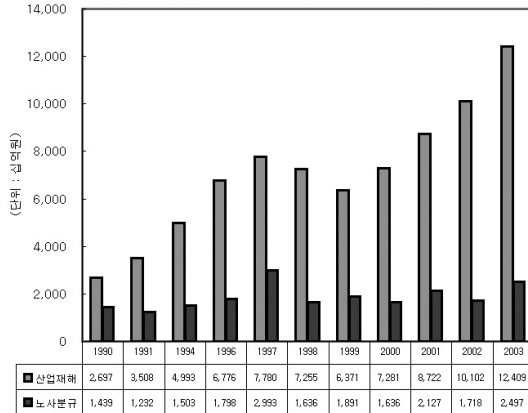
(2) 경제적 손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약 5배 수준이다.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손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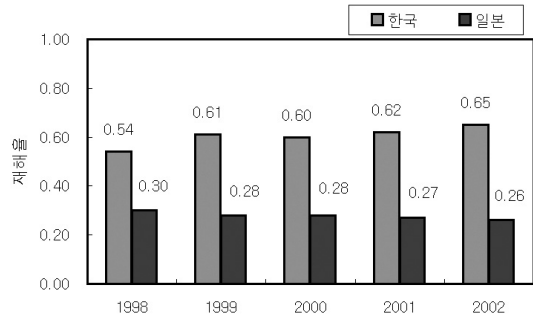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 및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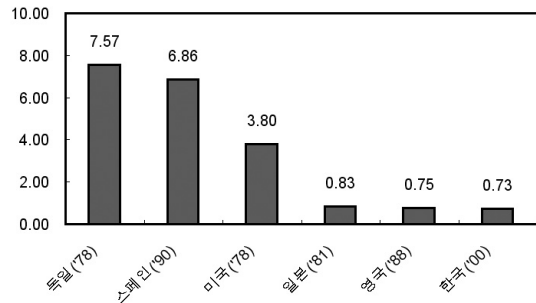


높게 나타났고, 국민소득 1만불 달성시기의 재해율을 비교하면 영국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상 휴업재해 기준 한일 재해율 비교〉



〈주요국의 국민소득 1만불 달성시기의 재해율 비교〉



2. 산업재해의 국제비교

재해율 산출과 관련하여 일반화된 국제기준이 없으며, 통계산출기준·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등이 달라 재해율을 국제적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본의 경우, 재해율을 휴업 4일 이상 재해자수를 산재보험 가입근로자수로 나눈 수치로 파악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간접적으로 재해율 비교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재해율을 일본 기준(휴업기준)으로 환산·비교하면 02년에 0.65%로 나타나 일본보다

3. 산업안전보건관련 법·제도

81년 법 제정 이후 총 13차에 걸쳐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안전보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들을 꾸준히 도입해온 결과, 법·제도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정책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상당히 기여하였다. 그러나, 법의 일부 조항이 『특조법』에 의해 적용이 배제되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활동이 충실하게 작동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법령이 산업현장에 친화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집행의 실효성·산업안전보건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4. 안전보건 의식 · 관행

최근의 재해증가 현상을 감안할 때 사업주들이 안전보건을 경영의 주된 요소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많다. 반면, 일부 경영자들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 책임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노사교섭과정에서도 임금 · 고용문제가 주된 이슈인 관계로 산업안전보건문제가 다루지는 빈도가 낮으며, 산업안전보건은 노사공동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요구 · 주장에 머물고 있어서 노사협력적인 산재예방활동이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형사고가 주기적으로 재발하고 있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의식이 내실있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여건 전망

1. 산업구조의 변화(제조업 비중 ↓, 서비스업 비중 ↑)로 새로운 안전보건문제 대두

세계화 · 정보화의 영향으로 최근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증대되는 등 산업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제조업의 사고성 재해는 감소효과가 기대되나, 서비스업 비중 증대로 인한 신종 직업성 질환, 직무상 스트레스 등 새로운 안전보건문제가 이슈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NP)에서 산업별 구성비 변화 전망〉

구 분	1980	1990	2000	2005	2010
제조업	28.6%	28.9%	31.3%	29.6%	28.0%
서비스산업	44.7%	48.3%	53.0%	55.5%	57.7%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산업별 생산 및 취업계수 증장기 전망, 2002

2. 노동시장의 변화(고령 · 여성근로자 증가, 외국인 지속유입 등)로 다양한 특성을 갖는 근로자군 증가

출산을 저하 및 고령화로 여성 · 고령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취업기피 현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나, 노동시장 유연화로 임시 · 일용 근로자 비중은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사업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3. 지식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노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욕구 증대

인터넷 등의 발달로 각종 사고가 실시간 전파되고, 경영진은 기업이미지 제고차원에서 안전보건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욕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2일 휴무에 따른 이완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이는 재해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지식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근로자들의 권리의식도 계속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정보 제공의 확대, 교육 · 홍보 등을 통해 안전의식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4. 세계화의 진전으로 안전보건기준의 국제적 표준화 가속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안전보건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더욱 부각될 것이고, 정보 · 자료의 자유로운 이동은 안전보건기준의 국제 표준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수준을 진단하고 안전보건기준의 국제적 표

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제3장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시책

1. 비전과 목표

〈표〉 제2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의 비전과 목표

비전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안전복지 사회" 달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장 조성 • 건강한 노동력 유지·증진 			
추진전략 : 선택과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재해 다발업종·영세사업장 등 산재 취약부문에 행정역량 집중 • 노사자율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되,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원칙 확립 • 전통적 유해·위험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새로운 안전보건문제에 능동 대응 • 노사정 및 유관단체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 • 노사의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훈련 활성화 				
취약부문 중점관리	자율산재예방 활동 촉진	근로자의 건강증진	사업장의 책임강화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재해 다발 업종 관리 강화 - 안전격차 해소 지원 - 대형산업사고 예방가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참여적 산재예방활동 기반 조성 - 사업장 자율 산재예방체제 정착 - 민간전문가 및 서비스기관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관련성 질환예방 강화 - 평생건강관리 체제 구축 -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의 법 준수 수품도 조성 - 교육·홍보 활동 강화 - 점검·감독의 현장 적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예방 인프라 구축 - 안전보건기준의 국제화 - 선진 예방기법 연구지원 및 국제교류 확대

2. 안전·보건 취약부문 중점관리

- ◆ 산업안전보건정책은 행정대상 전반에 대해 빠짐없이 고려되어야 하나 행정역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정책 추진에 있어 우선순위를 감안할 필요
- ◆ 산업재해 취약 부문에 대한 정책 역량을 강화, 재해 예방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망재해의 획기적 감소 등 재해감소 효과도 기대

가. 사망재해 다발업종(유형) 관리 강화

(1) 사망재해 1순위인 건설업의 추락 등 재래형

재해 감소방안을 마련·추진 : 안전관리비 제도 개선,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대상 재해범위 조정, 작업위험성평가기법 도입,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기준 강화 등

(2) 건설업 다음으로 사망재해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사망재해 예방을 위해 세부업종별로 특성에 맞는 중점관리방안 등의 사망재해 예방대책을 마련, 획기적인 사망재해 예방효과 극대화

(3)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업무상 질병사망자는 단기적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측면이 있음을 감안, 장기적인 감소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

나. 안전격차(Safety Divide) 해소 지원

(1)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 지도·지원기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의 자율 개선의지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상별로 차별화된 지도·지원 제공

① 자율 개선의지 보유 사업장 : CLEAN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 추진하고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보완

② 재해다발 구조적 취약 사업장 : 안전보건개선훈을 통해 안전보건능력 제고

③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장 : 엄정하게 법 집행

(2) 산재취약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① 여성, 고령자, 외국인,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에 대해 특화된 안전보건교육, 건강관리기법 보급 등 지원강화

② 점검 등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 이행 지도

(3) 모기업 :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상호협력사항을 정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적극 실시토록 모기업의 책임 부담 및 정부지원 강화(정부지원내용 : 각종 점검·감독 면제, 포상 등)



(4) 기계·기구, 방호장치 등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검사·검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시장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공인시험기관에 기술적 시험업무 참여허용, 검정기관도 수거검정을 수행토록 개방, 검사·검정대상의 합리적 조정, 업체의 제조·품질관리 능력을 검증하여 인증하는 제도 검토

다. 대형 산업사고 예방 기능 강화

(1) 공정안전문화(PSM Climate) 정착

- ① 화학업종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PSM 제도 정착이 필수임을 감안, 동 제도 개선 및 PSM 차등관리 내실화 도모
- ② PSM 적용기준을 미국·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고, 적용대상 물질 확대 및 PSM 사업장 차등관리방안의 제도화 추진
- ③ 궁극적으로 경영자부터 현장 근로자에게 이르기까지 PSM 규정의 준수풍토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추진

PSM문화 측정방법 개발·보급, 공정안전관리 12대 실천과제 보급

(2)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설치·운영

- ① 노동부·산업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동 예방센터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
- ② 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
- (3) SOC 건설현장 등 차등관리 강화
 - ① 국가균형발전전략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도 SOC건설공사 외 대규모 건축물 건설공사도 꾸준한 증가가 예상

- ② 차등관리대상으로 SOC현장 이외의 아파트, 빌딩 등의 건축물 건설현장에 추가 적용하는 방안 검토

3.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 촉진

- ◆ 사업장에서 산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사 참여에 기반한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자율적으로 구축·운영되고, 필요시 외부로부터 양질의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행 제도의 틀과 정책시스템으로는 한계
- ◆ 사업장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제가 효과적으로 구축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이러한 체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는 정책환경 조성 필요

가. 노사참여적 산재예방 활동기반 조성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
 - 위원회 업종별 운영모델 개발·보급, 우수사례 발굴·보급, 실태조사 후 심의대상 조정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 활성화 도모
 -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개선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노사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에 순기능을 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 (3) 노·사 단체의 재해예방정책 참여 확대
 - 노총, 경총 등 노·사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차원의 안전보건교육비 지원 등의 재정 지원 강화

나. 사업장 자율 산재예방체제 정착

- (1)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개편
 - ① 현재 보좌기능에 그치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위상을 강화하여 관리자로서의 명실상부한 역량을 충실히 발휘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관리 대행제도의 점진적 폐지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개편

② 필요시 외부의 전문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재해율 불량 등 일정요건 미달시 외부의 컨설팅을 받게 하는 등 자율과 책임 부여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OSHMS) 보급 확대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인증 활성화 방안 마련

② 인증기준·방법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도록 지속 개선

다. 민간전문가 및 서비스기관의 질 제고

(1)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제도 활성화

산업안전·위생 지도사가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손쉽게 사업장에 제공

안전보건개선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설계, 육성하여 재해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능력 제고

(2) 안전·보건관리 서비스 기관의 질 향상

책임있는 서비스가 미흡한 안전·보건관리 서비스기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의 수준평가 제도 마련 및 평가결과 공표, 과징금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 추진

4. 근로자의 건강 증진

◆ 정보통신업,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로 새로운 직종 및 작업형태와 관련된 작업관련성 질환이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근로자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제도가 운영중이나 실효성은 미흡

◆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한 예방프로그램 구축 필요

가.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강화

(1) 근골격계질환 예방기능 강화

질환 예방의무가 산업현장에 원만히 이행되도록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도·지원하되,

우리 현실에 적합하도록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 지속 추진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대한 노시간 이견 해소, 우리 실정에 맞는 예방프로그램 개발·보급, 노사참여적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 지원 확대, 고위험 업종·사업장 특별관리

(2) 뇌심혈관질환 예방

질환 예방기반이 산업현장에 확고히 구축되도록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보급, 5대 고위험 업종 사업장 DB구축, 질환 작업관리지침 지속 개발 등 다양한 방안 강구

나. 평생 건강관리체제 구축

(1) 건강진단체도 개선

획일적이고 공급자 위주의 건강진단체도를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건강진단체도로 개편 추진

① 일반건강진단 : 진단주기·항목을 건강실태 및 산업현장의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

② 특수건강진단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연계, 실시주기 조정 등

(2)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활성화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 공공 의료기관과 연계한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 지원, My Health 구축 등 추진

My Health : 근로자 특성에 적합한 특화된 건강정보 제공프로그램

다.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1)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내실화

① 최근 개선된 작업환경 측정대상·주기·측정횟수 등이 정착되도록 지도·점검 강화, 측정기관에 대한 불시 모니터링 강화 등 부실측정 예방



- ②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건강증진을 유기적으로 연계 또는 통합한 종합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도적으로 강구
- (2) 유해인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
- ① 국가 산업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표시기준의 국제기준으로의 상향조정 및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선
- ② 고소음지역 표시제도 도입 등 난청예방 종합대책 수립·시행

5. 사업장의 책임 강화

- ◆ 노사의 안전의식이 확고히 정착될 때 안전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나, 안전의식이 확고히 정착되지 못한 것이 현 주소
- ◆ 노사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할 필요

가. 노사의 법 준수풍토 조성

- (1) 법 위반 노사에 대한 제재 강화
- ① 반복적 또는 중대한 법 위반 사업주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행정·사법처리를 하는 등 제재 강화
- ② 사업주의 반복적인 법적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시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검토
- (2) 명단 공표제도의 확실한 정착
재해를 불량사업장 등에 대한 공표제도의 시행상 문제점을 지속 보완하는 등 제도정착에 노력
- (3)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합리화
- ① 프레스의 정기검사 부활 등 특조법에 의거 완화된 규제에 대해 관련부처와 공동연구하여 복원하는 방안 추진
- ② 규제 의존적 행정을 탈피하기 위해 각종 안전

보건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

나. 교육·홍보활동 강화

- (1) 평생안전교육 홍보 시스템 구축
- ① 어릴적부터 안전의식이 생활화·체질화되도록 어린이·어머니들에 대한 안전교육·홍보 지속 실시
- ② 계층별·세대별 특화된 교육·홍보, 업종별·규모별 수요자 욕구에 맞는 교육·홍보 등 평생안전교육 홍보시스템 구축
- ③ 교육생이 교육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요자 위주의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 (2) 내실있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안전문화운동에 음주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계몽을 포함하는 등 실질적으로 산재예방에 기여가능토록 개선방안 마련
- (3) 안전보건교육의 확대
- ① 주요 대학원 또는 공단 교육원에 산업안전보건정책 CEO과정을 부설 사회교육과정으로 개설·운영토록 지원
- ② 안전보건종합전시관 설립·운영, 전담강사 배치를 통한 이동안전교육의 내실화, 체험교육의 확대, 방송매체 활용 등 추진

다. 점검·감독의 현장 적용성 제고

- (1)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개편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유해·위험요인 등을 적절히 규율 가능토록 법 체계 개편 방안 검토
- (2) 점검·감독시스템의 현장 적용성 제고
실태조사를 거쳐 점검·감독 대상 조정, 유사 점검·감독 통합 등 산업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점검·감독시스템 개선

6.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

◆ 세계화 진전 등의 영향으로 산업안전기준의 국제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안전 보건수준을 국제수준으로 제고할 필요

가. 산재예방 인프라(Infra) 구축

- (1) 다양한 안전보건지표 개발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수준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안전보건지표 개발 추진
- (2) 산업재해 통계제도의 개선
산업현장의 재해현실, 경제적 영향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
- (3) 지도·감독 행정역량 강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기술직 감독관 증원 및 전문화교육 강화

나. 안전보건 기준의 국제화

- (1) 국제기준의 수용노력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ILO기준의 수용과 국내 안전보건기준의 국제표준화 노력을 강화
- (2) 「SHE-Q 통합모델」개발
 - ① OECD SHE-Q 통합모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SHE-Q 통합모델」 개발·보급
 - ② OECD에서 사업장 안전(S)·보건(H)·환경(E)·품질(Q) 관리체계를 각각 운영함으로써 인력·예산의 중복 등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국 주도로 통합모델을 개발기로 결정(04년 11월)

다. 선진 예방기법 연구 지원 및 국제교류 확대


- (1) 산업안전보건정책 연구활동 촉진

- ① 산업안전보건정책분야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안전공단 연구원의 기능을 강화
- ② 신규 기술·화학물질 사용 등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토록 대학원 등의 기초연구활동 지원강화
- (2) 선진국과의 협력활동 활성화
선진국과의 국가간 연수훈련 활동강화 등으로 안전보건분야의 선진 기술·정보 입수, 제도 도입 등 활성화
- (3) 개도국 등에 대한 기술협력 강화
 - ① 중국, 베트남 등 개도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술협력사업 확대로 국제적 위상 제고
 - ② 북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기술 지원방안 강구

제6장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성과 전망

◀ 제2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할 경우 업무상사고 재해율은 사고재해가 예방대책의 효과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03년 0.81% 보다 △25% 감소한 0.6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업무상질병재해율은 '03년 0.09% 보다 △10% 감소한 0.08% 달성,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은 '03년 1.45보다 1/3 이상 감소한 0.97로 1 미만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09년 재해율은 '03년도 재해율 0.9%보다 △25% 감소한 0.6%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사회 실현에 앞장서는 풍토가 정착되어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대형사고가 사라지는 「안전복지사회」실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노동부 발표 자료 중에서 -